

인천 지선·보선 선거 고소·고발 난타전… 네거티브 공세에 정책 실종

시설물·집회 등 위반 행위도 제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 경고 등 37건 조치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고소·고발 난타전이 이어지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정책 유권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2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보궐선거 포함)와 관련,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34건·고발 3건 등 모두 37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접수된 선거법 위반 유형은 시설물 13건, 기부행위 6건, 집회·모임 이용 3건, 공무원 관련 활동 4건, 허위사실공포 2건, 인쇄물 2건, 문자메시지 전송 2건, 유사기관 설치 1건, 기타 4건 등이다.

이 외에도 경찰을 통한 시장·구청장·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직접 고소·고발도 쏟아지고 있다.

유재홍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는 24일 차준택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를 허위 사실유언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

다. 이를 전 차 후보가 허위사실 명사로 유 후보를 선관위에 신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도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3일 정당 정책을 홍보하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언급했다는 이유다. 박 후보는 또 유 후보 측이 지지선언을 하지 않은 단체를 보도자료에 넣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 후보도 박 후보와 같은 당 맹성규·허종식 국회의원 등 3명이 허위사실로 성명·논평을 냈고, 특정 단독방에서 퍼뜨렸다고 고발했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상대편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사무실 앞 가짜지기의 흉상을 지속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사무소 주변 불법 현수막과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에서 고소·고발이 나오고 있다.

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16일 경쟁 상대인 조성훈·최계운 후보가 특정 정대에

기대면서 선거를 펼쳐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최 후보는 도 후보가 한 방송에 출연해 그에게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인천시의원 서구4선거구 신종식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2일 같은 지역구 출마자인 전제운 민주당 후보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주말에 열린 지역 체육행사에서 시상을 하기로 한 김교흥 국회의원 대신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시상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연일 쏟아지는 고소·고발 때문에 정작 필요한 미래 지향적 정책 대결은 사라졌고, 대신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공세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찰청 사무처장은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공방은 스스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라며 “유권자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가 일주일 남짓 남은 지금이라도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



민주당 “매립지 연장·투기 의혹 해명”… 국힘 유정복 총공세

野, 박근혜 정부 4자 합의 서명 지적
유 캠프 “효력 없는 문서 파기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들은 24일 오전과 오후, 국회와 인천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2044년 연장 논란과 유정복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나선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유정복 후보는 시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와 손 잡고 굴욕적인 4자 합의에 서명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실·국장단 이면합의를 통해 204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보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후보는 지난 7년 간이나 인천시민을 속였다. 머리 숙여 사과하고 후보직을 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신동근·김교흥 국회의원(왼쪽부터)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박남춘 캠프 제공

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있던 2015년 6월 28일 당시 실무 책임자인 인천시와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실·국장의 합의문에 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유 후보가 부인과 함께 많은 대출을 끌어다 경기도에 고가의 상가 2채를 매입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유 후보가 과거 낙선 한 뒤 돈을

쫓아 경기도 신도시 상가에 투자한 것이라면 유 후보는 300만 인천시장의 자격이 없다”며 “부동산 광풍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을 때 유 후보는 무슨 명목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후보 캠프는 “실·국장 합의문은 어떤 효력도 없다”며 “당시에도 문서 파기를 지시했고, 담당 국장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책한 뒤 매립지 종료 시한을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최태용 기자

도성훈 교육감 후보 선거 공보물에 전교조 활동 경력 無

4년 전 선거 인천지부장 경력과 대조적
서정호 “교장공모제 비위 인정한 것”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6·1 지방선거 공보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없다. 4년 전 선거에서 전교조 인천지부장 경력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도 후보의 공보물에는 인천시교육감 등 현재 맡고 있는 직책 6개를 명시했고, 과거 역임했던 동암중학교(행복배움학교) 교장, 성현고(현 인제고)·관교중·부개고·인천여공고(현 인천부티예술고)·동인천고 근무 경력만 있다.

이에 최계운 후보 측은 도 후보가 전교조 경력을 인천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나 변호가 없어 인천시민들에게 학력과 경력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하지만 도 후보



왼쪽부터 도성훈, 서정호,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

는 무엇이 두려워 이를 숨기려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정호 후보도 “경력사항 기재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4년 전과 달리 전교조 경력을 뺀 것은 전교조 출신 보좌관의 교장공모제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교육운동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교육감 4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공약을 다듬고 미래의 정책에 집중하자는 관점이다”라고 해명했다.

유정희 기자

경기도청이 광고 신청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경기도청 광고 신청사 이전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순차적 이전
※ 5월 30일부터 모든 사무는 신청사에서

열린민원실 민원창구 운영 (4.18일부터)
현청사, 신청사 병행 운영(4.18~5.27)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는 신청사에서만 가능

경기도청 광고 신청사 오시는 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지하철 이용 시 신분당선 광고중앙역 3번 출구에서 317m
버스 이용 시 광고중앙(아주대)역 환승센터 정류장 하차(지하 1층)

경기도 콜센터 031-120 홈페이지 https://www.gg.go.kr